

규제 샌드박스 안내

Guide to the
Regulatory Sandbox

규제 샌드박스 안내

Guide to the
Regulatory Sandbox

정부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 분야의 규제 체계를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새롭게 개편하고자 2019년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스타트업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부터 승인,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어려움 없이 혁신 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활용 바라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개념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신기술이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운영 체계

국무조정실의 총괄하에 5대 주관부처를 통해 (CT융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융합(산업자원통신부),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금융(금융위원회), 스마트시티(국토교통부) 분야로 운영중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운영 근거법

- 행정규제기본법 (19.7.17 시행)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9.1.17 시행)
- 산업융합촉진법 (19.1.17 시행)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19.4.17 시행)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19.4.1 시행)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20.2.27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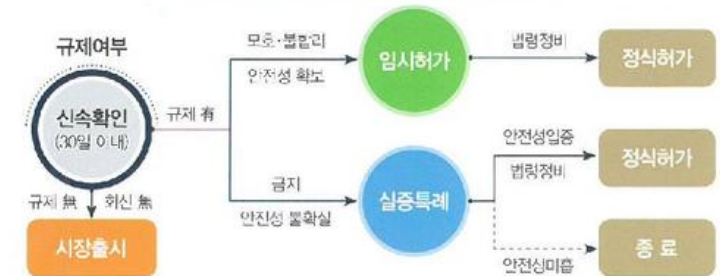


특례종류 및 안전장치

▶ 특례 종류 :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 1 신속확인 : 규제 존재 여부·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없음 간주
- 2 임시허가 : 법령 모호·불합리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우선 출시후 규정개정
- 3 실증특례 : 법령 모호·불합리 금지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시험·검증 허용

특례 운영 방식



▶ 안전 장치 : 생명·안전 검토^①, 문제 즉시대응^②, 배상책임 강화^③

- 1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우려 시 규제 특례 제한
- 2 규제특례 적용 중 문제 발생 또는 발생 예상 시 특례 취소
- 3 사전 책임보험 가입,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 → 사업자)



운영절차



※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특례승인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결정

주요 지원제도

※ 지원제도별 문의처는 5페이지 연락처 참고



신청·접수 지원

사전 컨설팅

규제 샌드박스 접수 전담기관은 기업이 정식 신청·접수하기 전에 사업모델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신청서류 작성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융합), 핀테크지원센터(금융),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원(스마트도시)이 분야별로 지원하며, 대한상공회의소(ICT, 산업융합, 혁신금융)에서도 지원
- 규제자유특구 관련 신청 및 문의는 각 시·도(수도권 제외)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문의

접수

제품 특성상 신청 분야가 모호한 경우는 각 전담기관 어느 곳이나 신청해도 적절한 소관 분야로 이관해 차질 없이 진행합니다.

신속 심사 및 실증 지원

신속심사

기존에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신청 사례는 심사 절차의 일부부처 협의, 분과위 검토 등)가 생략됩니다.

* 이미 승인받은 과제는 각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건 최소화

특례심의 시 과도한 부가 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해당 규제 부처에 조건부여 필요성, 해의 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합니다.

조건 변경요청

실증특례 사업자는 특례운영 과정 중 부가조건 완화를 위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조건을 변경합니다.

법령 정비 요청

실증특례 사업자는 실증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특례종료와 규제 정비 요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부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법령 제·개정에 착수합니다.



자금·세제 지원

전용펀드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상 전용펀드(금융위, 4년간 3천억원 / 중기부, 연간 500억원 규모 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은 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운전·시설 자금의 대출에 대해 최대 95% 보증비율로 보증 요율을 최대 0.5% 감면하며 20억원 한도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특례비용 지원

실증특례 승인기업에는 실증특례비(최대 1억 2천만원)와 책임 보험료(최대 1,500만원)를 지원합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시·도와 특구내 기업에는 R&D·사업화·인프라 조성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융자지원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은 주력산업 혁신과 신성장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우대금리 0.5~0.7%p)에 따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9년부터 3년간 10조원을 우대금리로 기업에 지원
 - 산업은행(중견기업 중심 7조원) : 기업당 시설자금 최대 2,500억원, 운영자금 최대 300억원
 - 기업은행(중소기업 중심 3조원) : 기업당 시설자금 최대 250억원, 운영자금 최대 30억원

세제지원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부터 규제자유특구내 기업의 경우 중소 5%, 중견 3%로 공제를 확대 적용

사업재편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승인 관련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산업융합 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 전환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시 지원



특허지원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기업은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특허분쟁 발생시 신속심판 대상으로 특허의 조기 권리화가 지원됩니다.

* 우선심사 평균 2개월 내외 심사종료 (일반심사 13개월 이상 소요)

* 신속심판 평균 3개월 내외 심사종료 (일반심사 12개월 이상 소요)

공공조달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구매 사업 응모 시 혁신성 평가가 인정됩니다.

- 공공조달 절차 : 사전 적격성 검토 → 혁신성 평가 → 조달 적합성 검토 → 조달 심의위
- 거래 실적이 없는 제품이 대상이나, 혁신 시제품 지정구매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여 소규모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도 한시적으로 허용(임시허가 사업도 가능)

기술·인증기준

신기술 제품의 기술 및 인증기준이 없어 출시가 지연되거나, 개정된 기준에 특례 제품이 부적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 단료 전에 기술·인증기준 개발과 특례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을 지원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해외진출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수출 바우처 등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별 문의처

구분	홈페이지	상담전화	신청·접수
신청 접수 상담	ICT융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andbox.or.kr	043-931-1000 sandbox@nipa.kr
	산업융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sandbox.ariat.or.kr	02-6009-4088 sandbox@ariat.or.kr
	규제자유특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sandbox.ariat.or.kr	02-6009-4072 시·도 규제특구 담당 부서 (수도권 제외)
	금융혁신	핀테크지원센터 fintechcenter.or.kr	070-8873-9005 sandboxfsc@korea.kr
	ICT, 산업, 금융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korcham.net	02-6050-3000~1 sandbox@korcham.net
	스마트시티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 smartcity.kaia.re.kr	031-389-6583 ykoo@kaia.re.kr
용자지원 (산업구조 조도와 지원프로그램)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 대상 kdb.co.kr	(산은) 02-787-6938 (제도 안내)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대출 상담)
	IBK기업은행중소기업 대상 mybank.ibk.co.kr	(기은) 02-729-7492 (제도 안내)	IBK기업은행 영업점 (대출 상담)
전용 펀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kgrowth.or.kr	02-2090-9141	지분투자팀
	한국벤처투자 k-vic.co.kr	02-2156-2016	운용1팀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 kibo.or.kr.444	1544-1120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규제자유특구 투자세액공제	산업기술진흥원 sandbox.ariat.or.kr	02-6009-4052	-
사업재편 지원	기업활력반향지원센터 oneshot.or.kr	02-6050-3161 02-6050-3162	주무부처
특허지원	특허청 kipo.go.kr	1544-8080	특허청 kipo.go.kr
공공조달 (혁신 시제품 지정구매)	혁신장터 ppi.g2b.go.kr	042-724-7203 042-724-7664	혁신장터 ppi.g2b.go.kr
기술·인증기준	국가기술표준원 kats.go.kr	1381 (인증표준원센터)	-
해외시장 개척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or.kr	1600-7119	해외진출지원 (kotra.or.kr) 수출바우처 (exportvoucher.com)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국제적으로 완성도 높은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2016년 영국에서 금융분야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 안에서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노는 것처럼 혁신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규제를 두고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이나 안전성 유무에 대해 막연한 주장과 추정이 아니라 실증을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례 종류



영국, 일본, 미국을 비롯해 20여개국은 서비스의 안정성을 제하적으로 시험·검증하는 실증특례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모델을 발전시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시장출시를 즉시 허용하는 임시허가 제도와 규제유무를 신속히 확인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적용 범위



주요국에서 금융분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혁신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분야(ICT융합·산업융합·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 전반에 광범위하게 시행중입니다.

특히, 지역단위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규제자유특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확산의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 기간



우리나라는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소요되어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심사합니다.

* 유사·동인 과제는 신속처리(Fast Track)를 통해 심사절차를 단축해 보다 빠르게 심사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유형 비교



한국

VS



외국

✓ 신속확인

✓ 임시허가

✓ 실증특례

해당없음

해당없음

✓ 실증특례



한국

실물경제
포함하는
5대 분야

영국

금융 중심,
최근 ICT·
에너지 확대

미국

금융 중심
(아리조나,
와이오밍 주)

일본

금융,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